

서평

Todd A. Henry,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 -1945*.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299 pp. \$47.75.

김태호†

공간은 정치적이다. 지금 2010년대에는 새삼스럽게 들릴 정도로 낯설지 않은 주장이지만,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몸담은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되도록 가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누구나 공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가는 누가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는가를 드러내게 된다. 일제 패망 후 남산 위의 조선 신사가 철거되고 한국 정부가 뒀날 그 자리에 안중근 기념관을 지은 일, 일본인 거주지였던 혼마치도리에 “충무로”라는 새 이름을 붙인 일, 오십 년 동안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잔해를 따로 떼어 전시한 일 등은 정치적인 동기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 남산 위에 조선 신사를 지었던 까닭이나 경복궁 경내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박람회를 열었던 까닭, 심지어 다시 거슬러 올라가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경복궁을 지은 까닭도 모두 정치적인 것들이다.

공간이 정치적이라는 주장이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들린다고 해도, 그 시각으로 풀어낸 공간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흥미롭다.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이 끝없이 변주될 수 있듯이 구체적인 공간을 텍스트로 삼는 비평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일 터이다.

그렇다면 서울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은 현재 남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연구소, taeho.kim.75@gmail.com

한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에서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울의 현재는 조선 왕조 개창 이래 600여 년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을 역사적으로 읽어내려면 근대, 근대성, 성장, 발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양은 언제, 어떻게, 누구의 주도 아래, 전근대 왕조의 도읍에서 근대 도시로 변모해 갔는가? 서울의 공간에 대한 분석들은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의 저작 가운데 임동근과 김종배의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반비, 2015)에서는 주로 1960년대 이후에 치중하고 있지만, 개인의 욕망과 국가의 통치 전략이라는 두 가지 힘을 축으로 삼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인 2016년 12월에 출판된 염복규의 신간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데아)은 서울을 “일본을 경유한 서구의 도시”라고 묘사하며 근대 도시 서울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

토드 헨리의 책은 서울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Assimilating Seoul*의 특별한 점은 일제 강점기 근대 서울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면서 “동화(assimilation)”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한국사에서 일제의 동화 정책을 다룰 때는 신사참배 강요와 같이 식민 통치 기간 중 특정한 시기와 국면에 집중된 정치적 선전과 강제 동원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저자는 동화를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신도(神道)의 강제 보급과 같은 것은 영적(spiritual) 동화라고 규정하고, 이밖에도 물질적(material) 동화와 시민적(civic) 동화를 향한 식민 통치자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일제 강점기 서울(경성)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구도다. 물질적 동화란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시민적 동화란 근대적 위생 관념을 비롯한 각종 공공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근대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 정비 계획을 통해 이와 같은 동화 시책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남산에 조선 신사를 짓고 그에 대한 참배 행렬을 조직하는 것은 영적 동화를 위한 시도였으며, 경복궁 경내에서 박람회 열고 조선 민중에게 근대 물질 문명의 발전상을 과시한 것은 물질적 동화를 위한 시도였고, 위생과 방역의 명분 아래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계몽 활동을 벌이고 총독부가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간 것은 시민적 동화를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책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차례로 일제 강점기 서울의 정비 사업, 조선 신사의 건립과 그에 수반된 각종 의례 활동들, 박람회 공간으로 변형된

경북궁,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위생 계몽 사업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조선 총독부가 다방면으로 벌였던 동화 사업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내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동화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었지만, 동화라는 명분을 내건 이상 그 명분은 의도치 않게 식민 권력의 행보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이 내세운 동화라는 명분의 허구성을 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지적인 접촉지대(contact zone)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은 식민 지배라는 구조적 질곡 안에서 나름대로 운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시 체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표방과 실제의 괴리는 지속될 수 없었고, 국지적으로 열렸던 접촉 지대들은 닫혀버리면서 신사 참배 강요와 같은 폭력적인 일방적 동화 정책만 남게 되었다. 제5장은 이와 같은 전시 체제의 신민화(subjectification)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전시 체제는 결국 동화라는 구호 자체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내었다. 동화는 조선인이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기획이었던 것이다.

동화를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한 것에서 드러나듯, 저자의 동화에 대한 규정은 국내의 한국사 연구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 국내의 한국사 연구에서 “동화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동화에 국한된다. 나머지 두 양상, 즉 물질적 동화와 시민적 동화로 표현되는 사건들은 “동화”라기보다는 대체로 “근대화”라는 이름을 붙여 연구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한국사 연구에서는 “동화”는 곧 직접적인 “일본화”를 뜻한 데 비해, 헨리는 일본 식민 통치가 표방한 근대성에 동조하는 것까지 “동화”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화”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일본에 대한 동화인가, 근대에 대한 동화인가, 아니면 일본을 통해 들어온 일본적 근대에 대한 동화인가? 이 책은 동화를 “식민지적 근대성의 내면화”라는 의미에 가깝게 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용례를 넓힘으로써 해석의 지평이 넓어지고 식민지 시기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수긍할만한 것이지만, 국내의 연구 전통에서 동화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두 갈래의 논의를 섞는 것은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다만 이것을 혼란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독자의 선택일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간을 텍스트 삼아 그것을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널리 퍼진 서술 형태가 되었다. 지리학, 사회학, 역사학 등 여러 분과 학문에서 이와 같은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과학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정보의 출처로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방법론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은 과학, 기술, 의료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도시 계획과 도시의 성장, 조선물산공진회를 비롯한 산업 박람회, 또는 위생을 내세운 강압적 보건 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 성과도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알의 소재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책처럼 하나의 키워드 아래 그것들을 엮어내는 연구는 드물다. 사실 이것은 최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 근현대 과학, 기술, 의료사 연구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소재는 속속 발굴되고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소재의 생경함이나 참신함을 넘어서 역사학계 일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목직한 주장은 자주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 까닭을 생각하다 보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맥락화하고 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헨리는 이 책의 서론에서 보여주듯 통치성(governmentality), 공공(public), 접촉지대(contact zone) 등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빌려와 책의 짜임새를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충실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다면,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도 그것이 단편적인 일화로 소개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주장을 구성하는 주춧돌이 되어 역사학 일반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역사학계의 연구사와 연구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